



#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5호 | 2009년10월14일자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종훈 | www.nars.go.kr

## 한·중 FTA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0일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한·중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의 조기체결 가능성을 선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비록 최근에 한·미 FTA 및 한·일 FTA 체결추진에 따라 중국측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기 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한·중 FTA와 관련한 논의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중 FTA가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될 것이라 전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조기체결론’과 ‘신중론’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중 FTA 논의의 배경과 이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살펴본 뒤 ‘조기체결론’과 ‘신중론’으로 대표되는 국내의 여론동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중 FTA 체결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 2. 한·중 FTA의 논의 배경과 경제적 기대효과

#### 1) 한·중 FTA의 논의 배경

한·중 FTA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ASEAN+3 회담 중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한·중 FTA 추진에 관한 2년간의 민간공동연구를 합의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양국의 간사기관인 중국의 국무원 산하 ‘세계발전연구중심’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한·중 경제협력 현황,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무역·투자효과, 그리고 산업별 효과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6월 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중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진행과정에서 중국은 초기에 한·중 FTA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우리나라가 한·미 FTA와 한·일 FTA 등을 추진하자 중국은 입장을 급선화하여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

지난 2009년 4월 6일 중국의 양제츠 외교 부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내외 신 기자회견에서 “한·중 FTA가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양측이 서로 마주 보며 진행시켜 나가자(相向而行)”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월 10일의 한·중 양국의 합의는 한·중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 2)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한·중 통상관계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국내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분석 모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는 한·미 FTA 및 한·EU FTA의 발효 여부, 그리고 관세환급에 대한 고려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관세환급’이란 중국 내 가공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중국 내에서 가공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그 중간재 수입에 대해 중국정부가 부과했던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같은 관세환급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실질 관세율은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맥락에서 각 상황에 따른 거시경제효과와 산업별 경제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표 2> 참조).

우선, 한·중 FTA만 발효될 경우 기대되는 실질 GDP성장률은 최소 0.21%에서 최대 2.56%에 달하고, 후생변화율은 최대 0.41%에서 최대 2.80%에 달한다. 산업별 경제적 기대효과는 농수산업의 경우 최소 -0.84%에서 최대 -2.67%, 제조업의 경우 최소 0.53%에서 최대 4.93%, 서비스업의 경우 최소 1.00%에서 최대 5.27%의 성장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전산업을 대상으로 산출할 경우 최소 0.64%에서 최대 4.59%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 한·중 FTA 경제적 기대효과 I

(한·중 FTA만 발효된 경우)

구분		관세환급 고려	관세환급 미고려
거시경제 효과	실질 GDP	0.21~1.96	0.24~2.56
	후생변화율	0.41~1.92	0.59~2.80
산업별 효과	농수산업	-1.09~-2.67	-0.84~-1.76
	제조업	0.53~3.20	0.92~4.93
	서비스업	1.00~3.35	1.56~5.27
	전산업	0.64~2.84	1.10~4.59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년 6월)

한편,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된 후에 한·중 FTA가 발효되는 경우를 상정한 경우에, 실질 GDP는 최소 0.11%에서 최대 2.34%의 성장이 예측되며, 후생변화율은 최소 0.32%에서 최대 2.6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수산업은 최소 -2.69%에서 최대 0.23%, 제조업은 최소 0.52%에서 최대 6.78%, 서비스업의 경우는 최소 0.90%에서 최대 6.48%의 성장효과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

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전산업의 성장증가율은 최소 0.69%에서 최대 6.02%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2> 한·중 FTA 경제적 기대효과 II**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된 경우)

구분		관세환급 고려	관세환급 미고려
거시경제 효과	실질 GDP	0.11~1.71	0.13~2.34
	후생변화율	0.32~1.80	0.48~2.63
산업별 효과	농수산업	0.23~-2.69	0.41~-2.08
	제조업	0.52~5.13	0.89~6.78
	서비스업	0.90~4.66	1.43~6.48
	전산업	0.69~4.36	1.13~6.02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년 6월)

이 같은 결과는 한·중 FTA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에는 긍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업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중국에서 훨씬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농수산업에서는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05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규모가 최소 140억 달러에서 최대 145억 달러에 이르는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최소 142억에서 최대 145억 달러 규모의 대한민국 수출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분야의 대중국 투자증대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한·중 FTA 관련 국내여론**

**1) 조기체결론**

한·중 FTA에 대한 국내의 여론은 조기체결론과 신중론으로 대별되는 바, 우선 한·중 FTA 조기체결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중 FTA는 한·중 간의 급속한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 둘째, FTA를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선점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중국은 이미 우리에게 유리한 양보안을 제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리한 FTA가 될 것이라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신중론**

이에 반해 한·중 FTA에 대한 신중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기체결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첫째, 농수산업에서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체결되는 한·중 FTA는 문제가 있다는 점, 둘째,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제교류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FTA 체결 없이도 확대될 것이므로 FTA 체결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셋째, 중국의 제도적 불투명성으로 인해 자칫 중국의 저가 공산품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우리 국민의 보건·안전·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

## 4. 향후과제

### 1) 외교전략적 측면

중국의 한·중 FTA 체결은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정치군사적 의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외교전략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중 FTA 체결을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고, 일본과의 역내 지역협력을 위한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확대와 북·중 간의 경제협력관계를 연계하여 북한 경제의 안정에 투여해야 하는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 그리고 대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중 FTA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에 한반도 안보문제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연계한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경제적 측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업의 경우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는 여타의 FTA 체결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산업전략이라기 보다는 단기적인 보상대책에 머물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우

리나라 산업전략의 관점에서 FTA 대책이 필요하다. 가령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산업구조의 안정 내지 발전방향과 FTA 체결 및 보상대책간의 연계방안을 포함하는 사전적인 산업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의 저렴한 농수산물의 수입확대에 따른 피해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노력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 3) 협상내용상의 측면

해외직접투자의 대상으로서 중국시장은 대단히 매력적임은 주지의 사실로, 중국에 대한 우리의 투자자유화는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투자부문을 확대하는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한 중국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공세적 투자(예, 한국 기업 인수·합병)와 같은 부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한·중 FTA에 대한 신중론의 대표적인 근거 중의 하나가 중국의 상품유입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환경, 보건, 안전 등의 피해우려임을 감안하여,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유 응 조 (정치학 박사)  
(788-4551, wyoukr@nars.go.kr)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수시로 발간되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정보 소식지입니다.

※ 본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